

社 說

대학경영, 각자의 색을 가져야

지난 11일 발표된 성균관대의 기업형 경영기법 도입 방침은 교육시장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의 대학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더이상 현재의 체제와 내용으로는 외국 교육의 막대한 자본과 노하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더불어 이제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대학의 존재가치에 대한 엄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간제 학생도입', '특기자 선발'등의 많은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성공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성대의 기업경영 도입은 정서적인 면에서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적인 측면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경영의 합리적인 측면을 대학에 도입한다면 교육시장개방의 파고를 보다 원만하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대의 이번 기업경영기법 도입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팀제 개편, 예산 집행에 대한 부서별 전권 위임, 학생들에 대한 전체 민원업무 수행하는 민원업무실 신설, 교수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등이 기조를 이룬다. 이와같은 세부 조치들은 대학경영에 만연되어 있는 경직성과 관료성을 극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대에서 실시한 기업경영 도입이 대학경영의 미래로서 규정지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관료성과 경직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성대는 성대에 맞는 대학경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변화와 개혁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학교는 우리학교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해서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극복방안들을 창출해야만 한다.

성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만 한다는 현실인식과 더불어 변화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대학인 모두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린대학으로 가는 길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각 대학마다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최소전공학제 실시, 교양과목의 확대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학생'제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마감한 우리학교 시간제 학생 원서 접수 결과만 보더라도 1책77명이 지원, 6.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직 시범시행이라는 점과 제한된 학과에 적은 모집인원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열렬한 교육열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배움의 욕구에 비해 전문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부족했단가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동안 편입학이라든지 독학사제도 등이 이런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배움의 마당을 제공하기보다는 졸업장이라는 간판의식에 치우쳐 있었고 대학은 대학대로 공공단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중에 대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대학에서 등록해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학점에 도달하면 대학에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교졸업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의 시초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으로서도 최근의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한다면 명실상부한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사회 재교육의 역할을 다 할수 있을때 대학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사회교육의 산실로써 탈바꿈할때만이 열린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론

정치자금법 개정되어야 한다

이세상에 뇌물이란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 면죄부될 수 있어

위반자 엄중한 처벌 강화 필요

관 현

(경실련 정책실 간사)

한보사태로 야기된 정치부패가 새삼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나, 정작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들이 대가성 뇌물이 아닌 단순한 '떡값' 명목이란 면죄부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은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관계법을 당리당락과 기득권보호에 얽매어 오히려 개악하였다.

법개정의 이유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검은돈의 소지가 있는 무기명 기탁이 가능해, 소위 정액영수증을 정당의 중앙당은 물론 시·도지부 후원회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해 정치인 스스로가 정치권에 검은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11조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당에 기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뿐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서는 뇌물 알선수재 공갈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된 뇌물성 정치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해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불건전한 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합리적인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정치자금실명제를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사실상 익명이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 정액영수증제는 실명제에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특히 일정액 이상은 반드시 수표로 기부하고 지출내역도 인적사항을 명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개정된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무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선거법 위반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도 벌과금을 부여하는 등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민주화를 이룬 선진국들도 끊임없이 법망을 보완하면서도 정치자금을 완전히 투명하게 할 수는 없다고 법과 관행, 국민의식이 어우러져 투명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따금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긴 하나 모든 정치자금은 모금에서 지출까지 철저히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선 출마자들은 예비선거 과정에서 정치헌금을 받은 수표 사용은 의무화하고 현금 기부와 단체의 이권청탁을 막기 위해 개인 1천달러, 단체 5천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투명도 높은 선진국

프랑스는 완전 공영제로 반드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물론 정치헌금을 모금해 추가로



▲한보사태이후 대통령사과 성명

(사진: 한겨레 21)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 제한액 1억2천만프랑(1백94억원 상당)을 선거1년 전부터 적용한다. 법인의 정치헌금 한도는 연간 50만프랑(8천1백만원 상당)으로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며 자금추적이 가능하도록 1천프랑 이상의 기부금은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기부는 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민간단체 개정안 제시

일본도 5만엔 이상을 현금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지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금 파티가 활용되고 있으나 입장권은 1만~5만

엔이 대부분이며 20만엔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보 특혜의혹 사건을 계기로 '떡값' 등 정치인들의 변칙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할 장치가 없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올해 2월 12일 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하였다. 여·야 정치인들이 정당의 이해를 넘어서 이번 한보사태를 거울삼아 청정유착의 고리를 끊어, 더이상 검은 돈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귀를 기울일때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PC
통신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뽀뽀롱스타킹 방송출연 금지에 찬반의견 엇갈려

얼마전 뽀뽀롱스타킹이라는 그룹이 MBC 가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카메라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측은 1년간 TV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어 통신인들의 의견을 천리안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도저히 그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뽀뽀롱스타킹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음악적 자유를 빙자하여 시청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ID: PYTT) 또한 시청자들은 카메라를 통해 공연을 보게 되는데 카메라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결국 시청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심한 분노를 표명한 이도 있었다.(ID: URCHIN8) 더욱이 일반 콘서트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되는 공영방송에서의 그런 행위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ID: GMYSELF)

이와는 반대로 립싱크나 하면서 춤으로 인기나 끌어모으려는 댄서형 가수들보다는 라이브로 노래하며

시대적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그들의 음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ID: OMMU) 외국음악계를 예로 들어, 끊임없이 기존 사회의 편견을 뜯어 고쳐려는 음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음악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견해도 있다.(ID: DIOMEDEA) 또, 음악에 몰입하게 되면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ID: Y3570) 그들의 음악을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음악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권위적인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ID: XYSMJAS)

그외에도 1년간의 출연전면금지는 너무 심하다는 의견과(ID: A780220) 그들에게 공감은 하지만 좀더 순수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도 있다.

뽀뽀롱스타킹은 어느 정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최용섭 기자)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정

잘~ 나가네!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잘 나가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경제의 동맥이 되는 에너지·화학산업과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분야는 끄떡없습니다. 에너지·화학분야의 대표기업 유공과 우리나라 무선통신기술의 개척자 한국이동통신-에너지와 정보통신의 No.1 기업이 바로 선정안에 있습니다. 이 No.1 선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자원인 젊은 인재들.

잘 나가는 분야라면, 또 잘 나가고 싶은 분야라면 사람을 키우는 선정으로 오십시오. 미래가 더 밝은 기업, 선정. 그래서 요즘 장래가 촉망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찬사를 선정도 자주 듣습니다. "잘~ 나가네"

사람이 자원이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정

• 선정채용상담실 02)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을지로 27) 36-1 선정빌딩 1층
•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